

<b>진보당</b> 충북도당	보도자료	담 당 자	이소영 사무처장
		연 락 처	010-3553-8129
배 포 일 : 2020년 9월 15일(화)			

## 진보당, 제대로 된 전국민고용보험 충북운동본부 발족

9월 15일(화) 오전11시 충북도청서문 앞에서 발족식 개최

1. 진보당 충북도당은 9월 15일 오전 11시 최은섭 충북도당부위원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제대로 된 전국민고용보험 충북운동본부’ (운동본부)를 발족했습니다.
2. 운동본부는 “정부는 2025년까지 예술인,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노동자, 프리랜서, 자영업자 순으로 단계별로 대상범위를 확대하는 (전국민고용보험) 로드맵의 연내 제출을 약속했다”며 “하지만 코로나 위기가 언제 끝날지 기약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정부의 계획은 안이하고 소극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3. 최은섭 운동본부장은 “이제 재난은 일상이 되었고, 그때그때 임시방편인 재난지원금으로 우리의 삶을 더 이상 지킬 수 없다는 것이 국민의 상식이 되었다”며 “진보당이 벼랑 끝에 선 노동자들, 모든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사각지대 해소와 노동자성 확보를 위해 더 힘껏 땀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4. 초중고에서 국악을 가르치는 김광중씨는 “실업급여 제한조건(기여요건) 때문에, 18개월동안 180일을 채우기가 어렵고, 채우더라도 단시간노동자라는 이유로 다른 노동자보다 수급금액이 절반도 채 되지 않는다.  
고용보험은 노동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굉장히 중요한 제도지만 법의 허점 때문에 권리를 제한받는 노동자들이 많다.  
제대로 된 전국민 고용보험을 통해 코로나가 불러올 경제위기와 생계곤란을

대비할 수 있기를, 사회적약자들의 온전한 사회보장이 되길 바란다 “고 했습니다.

5. 기자회견문과 사진을 첨부하오니 기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보도 부탁드립니다.

## 진보당, 제대로 된 전국민 고용보험 증폭운동본부 발족식 기자회견문

전국민고용보험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이미 이뤄졌다.

정부도 2025년까지 예술인,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노동자, 프리랜서, 자영업자 순으로 단계별로 대상범위를 확대하는 로드맵의 연내 제출을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코로나 위기가 언제 끝날지 기약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정부의 계획은 안이하고 소극적이다. 문재인대통령의 말처럼 지금은 경제전시상황 아닌가!

재난의 위기를 ‘모두의 생존과 더 평등한 미래를 위한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

진보당 충북도당은 일하는 사람 모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전국민고용보험 도입 운동에 돌입한다. 진보당은 다음의 4대 과제를 충북도민들과 함께 전개해 나갈 것이다.

### 첫째, 우리는 단계적 도입이 아닌 즉시 도입을 촉구해 나갈 것이다

2025년은 너무 늦다. 고용보험 바깥에 있는 노동자들은 이미 오랜 시간 고통을 받아왔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지금 일터에서는 건강보험처럼 코로나 19 확산을 저지하는 방패역할을 해 줄 전국민고용보험이 즉시 도입되길 바라고 있다. 5년 뒤에 고용보험에 가입하게 되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보게 되는 것은 2~3년 후가 될 텐데, 고용보험 바깥에 있는 불안정 노동자들에게 7~8년은 너무나 아득한 시간이다.

고용형태를 따지지 말아야 한다. 오늘은 노동자였지만, 고용형태를 교묘하게 바꿔 특수고용직으로 바꿔 버리면 똑같은 작업을 해도 노동자의 신분에서 자영업자의 신분으로 바뀌고 만다. 4차 산업의 활성화가 더 많은 노동자들을 더 모호한 고용관계로 만들 것으로 전망되는 시점에서 일하는 사람 전부가 아닌, 전통적 고용관계에 기초한 선별·배제 접근법으로, 차차 확대하겠다는 발상은 현실에 맞지 않다.

둘째, 우리는 고용보험에 배제되어 있는 당사자들의 노동실태와 요구를 적극적으로 알려나가며, 이들의 의사가 정확히 반영된 전국민고용보험(안)이 만들

**어질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모두 정부가 연내에 발표한다는 전국민고용보험 구체 로드맵을 주시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노동자들의 생생한 현실이 반영되는 것이다. 제도 기술적 대책도 중요하지만, 이를 우선하면 제대로 된 전국민고용보험이 나올 수 없다. 전국민고용보험 시대는 정책적 결단과 의지로 열어내는 것이며, 그 동력은 실업과 폐업의 위험에 항상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1400만여명의 고용보험 미가입자들의 절절한 삶의 요구이다.

진보당은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노동자, 프랜차이즈, 자영업자 등 고용보험 바깥의 당사자들의 의사와 요구를 모아가 제대로 된 전국민고용보험 도입을 현실화할 것이다.

**셋째, 우리는 전국민고용보험 도입운동과 함께 모든 노동자들의 노동자성 인정 및 권리 쟁취를 위한 투쟁을 병행해 나갈 것이다.**

고용보험 사각지대가 발생한 근본적인 원인은 전통적 고용관계에 기초해 노동자성을 해석하는 비현실적인 법제도에 있다. 당면해서는 민주노총과 함께 ‘근로기준법 및 노동조합법 개정 국민동의청원’을 전개할 것이며, 노동자들의 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모든 투쟁에 연대할 것이다.

**넷째, 우리는 ‘일하는 사람 모두를 위한 고용보험 지원 조례’를 제안한다**

반쪽짜리 고용보험법의 현실을 보완하기 위해 정부와 일부 지자체에서 고용보험 임의가입 대상자인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 지원 사업을 하고 있다. 서울, 대전, 부산, 경남 등 13개의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매우 제한적이기는 하나 고용보험료 지원 조례가 있지만 충청북도는 이마저도 없다.

근본적인 문제는 고용보험법에 있다. 하지만, 당장에 코로나로 인한 실업, 소득감소, 폐업의 위험이 높아가는 조건에서 하루라도 더 빨리, 한 명이라도 더 많이 고용보험 사각지대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충청북도에도 고용보험 지원 조례가 제정되기를 바라며 이를 위한 실천활동을 전개할 것이다.

2020년 9월 15일

**진보당 제대로 된 전국민고용보험 충북운동본부**

※ [첨부자료] 광역자치단체 고용보험료 지원 조례 현황

구분	현황
서울	1인 소상공인 기준보수 7등급까지 월 보험료의 30% 3년간 지원
대전	고용보험 가입 고용원수 3개월 이상 유지시 보험료 3개월분 지원
대구	사회적기업 보험료 지원
광주	사회적기업 보험료 지원
부산	사회적기업 보험료 지원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보험료 지원은 포함
울산	없음
세종	없음
강원	10인 미만 기업 사회보험료 사업주 부담분 지원(전액)
경기	기준보수 7등급까지 월 보험료의 30% 3년간 지원
충북	없음
충남	10인 미만 기업 사회보험료 사업주 부담분 지원(전액)
전북	1인 소상공인 기준보수 1~4등급까지 고용보험료의 30%
전남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보험료 지원은 포함
경북	사회적기업 보험료 지원 소상공인 지원 조례에 근거 조항만 포함
경남	1인 자영업자 월 보험료의 40% 지원
제주	10인 미만 기업 사회보험료 80% 지원